

배포
2024.11.22.(금)

보도자료

보도
2024.11.22.(금)
15:00 이후

제목 ‘학생 위한 기부금’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를
‘협박’하고 ‘강요’한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을 규탄한다!
총 3 면

발신 : 전국교수연대회의(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문의 : 전국교수연대회의 공동대표 선재원(010-8853-8334)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보도로 우리나라 교육정상화에 기여해 오며 불철주야 정론직필을 해 오신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 교수 톤'압 규탄 전국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

‘학생 위한 기부금’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를 ‘협박’하고 ‘강요’한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을 규탄한다!

일정: 2024년 11월 22일(금) 14:30~15:00

장소: 평택대학교

주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1월 22일(금) 평택대학교에서 ‘학생 위한 기부금’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를 ‘협박’하고 ‘강요’한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지난 6월 21일에 전국의 교수단체 대표가 평택대법인 소유의 광화문 피어선빌딩 앞에서 평택대 법인의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행정소송을 규탄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계안 평택대 법인 이사장은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멈추지 않고, 투명한 대학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대 법인은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를 ‘협박’하고 청구 못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동현 평택대 총장이 지난 11월 18일에 전국교수연대회의가 평택대에서 개최하는 전국순회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사들에게 행사를 방해하는 공문을 보내, 대학의 전당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대학 공공성강화를 위해 이러한 사태를 끼과할 수 없어 긴급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전국순회토론회 방해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고, 평택대 구성원과 지역시민이 투명하여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교수 텐'압 규탄' 전국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

'학생 위한 기부금'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를 '협박'하고 '강요'한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을 규탄한다!

전국의 교수단체 대표는 지난 6월 21일에 평택대법인 소유의 광화문 피어 선빌딩 앞에서 평택대 법인의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행정소송을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이계안 평택대 법인 이사장은 행정소송을 멈추지 않고, 투명한 대학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평택대 법인은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를 ‘협박’하고 청구 못하도록 강요도 했다.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지난 11월 18일에 전국교수연대회의가 평택대에서 개최하는 전국순회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사들에게 행사를 방해하는 공문을 보내는 대학의 전당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묵과할 수 없어 토론회 개최 전에 긴급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1.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를 ‘협박’하고 ‘강요’한 이계안 이사장

이계안 이사장은 평택대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한 교수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못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했다(평택대 법인 공문: 피어선824, 2024.9.30.).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정보공개법 제5조)라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정보공개의 권리를 대학 구성원이 공공성강화를 위해 행사한 것에 대해 ‘협박’과 ‘강요’로 제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4조[강요])에 저촉되는 것이다.

2. ‘현 이사회 구성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계안 이사장

국민의힘 광주도 전 국회의원은 초중고 및 고등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준비를 최종 점검하는 회의에서 ‘평택대’ 사안만을 특별히 언급했다(제382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2020.9.22.).

이후 1기 관선이사 전월이 교육부 주도로 2기 관선이사로 교체되었다. 2022년 평택대(전 피어선대) 신학과 출신이자 평택대 이사장이었던 김삼환 목사가 자신의 명성교회에서 주재한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가 있었다(시사 타임즈 2022.6.27.). 축사를 대독한 강승규 당시 시민사회수석(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교육부문을 담당했다. 이후 늦어지던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 현재 평택대 법인 사무국장은 명성교회 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2기 이사들과 교육부는 평택대가 시가 1천 3백억 원의 광화문 토지 등 전국 상위권 법인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여 자생력이 있음을 알고도 ‘재정기여’ 기업인사 등으로 정이사체제를 구성했다. ‘재정기여’ 기업 선정과정 자체에도 의혹이 많다. 이에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사학혁신을 진행해 왔던 평택대의 투명한 대학경영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3. ‘정보공개 청구’를 “경영비밀”이라고 ‘거부’한 이계안 이사장

평택대 구성원 ·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는 교육공동체는 비리 구재단에 버금 가는 파행적 대학 및 이사회 운영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1) 기준 미달인 기업을 ‘재정기여’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
- 2) 현 이사 추천 기준 및 선정 과정
- 3) 총장 직선제 등 사학혁신지원사업 약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 4) 학생 위한 기부금 입금경로 및 사용내역
- 5) 교원소청위 상대 등 법률비용 관련 예산 수립 및 결산 내역

그러나 이계안 이사장은 국민 기본권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전국순회토론회 방해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평택대 구성원과 지역시민이 투명하여 안정적인 대학운영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4년 11월 22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